

취임 1주년 윤 대통령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기자회견 없이 SNS에 글 올려 국무회의 ‘과감한 인사조치’ 발원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메시지를 남겼다.

페이스북에도 지난 1년 국정을 돌아보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담은 2분 42초 길이 동영상상을 함께 올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가 있을 경우 “역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무위원들에게 ‘과감한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를 확실히 밝혀온 만큼 이제부터는 관료 사회 안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단호하게 처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사숙고해서 임명하되 일단 업무를 맡기면 역량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면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와는 거리를 뒀던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인사 철학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stance)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시도한 ‘변화’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 앞으로는 ‘성과’를 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민생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합심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다.

집권 2년 차 들어 특히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정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전에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일하라는 기강 확립 차원의 말씀이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인사조치의 필요 사례로 꼭 짚어 거론한 점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회자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개편을 물밑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관료가 핵심 참모 후보로 인사 검증 대상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율리 윤 대통령 비서관은 “과감한 인사 조치는 지시 대상인 장관 본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조만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의 방향을 우회 암시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장관들을 상당히 압박하는 발언이었다”며 “장관들이 뜨끔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자문위 구성 합의

대학 교류·교원 방문 등 검토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단체가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이하 기금)의 공동사업을 검토할 운영위원회와 이에 대해 조언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経団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을 통한 공동사업의 구체화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운영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키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한국에서는 김윤 전경련 부회장 겸 삼양홀딩스 회장, 이용열 전경련 부회장 겸 코모름 명예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본 측에서는 사토 아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히가시하라 도시야키 히타치제철소 회장, 구보타 마사카즈 게이단렌 부회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사토 고문과 히가시하라 회장도 게이단렌 부회장이다.

자문위원장은 강성진 고려대 교수와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취임한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기금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양국 대학 간 교류 강화, 한국 고등학교 교원의 일본 방문과 인턴십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반도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등 경제안보 환경 정비,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유지와 강화,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전염병 확산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7월 6일 서울에서 ‘한일산업 협력포럼’을 열어 반도체와 탈탄소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금 창설 계획은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해결책이 발표된 이후 공개됐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 16일 한일 경제교류 강화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기금을 창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진통...세번째 회의서도 합의 불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평행선 피해자 요건도 이견...16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0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토위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가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여야 모두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지는 취지엔 동의했다”며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최종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남은 쟁점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결론내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임차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산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 요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안은 정부·여당이 다른 범주 피해자와 구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의 경우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정자를 좁히지는 못했다.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입찰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소멸 대응 방안’ 국제 컨퍼런스

지속가능 지방시대 균형발전 논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방의 생산인구 유출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을 국제 정책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이자벨 샤티(Isabelle Chatry) OECD 지방재정분권국장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 ‘지역교육재정과 지역혁신’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제2세션 ‘지역활성화 성공사례와 균형발전 제도설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발제에 나선 나가이 쇼이치(가와바 주식회사)대표는 일본 군마현 가와바촌의 파산 직전인 마을기업의 혁신을 통해 2023년 전국 1위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제2발제의 박상수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는 지방

재정 여건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등을 주도할 수 있는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확대와 강화’라는 ‘지방시대’를 질실히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가 앞으로 열어나갈 ‘지방시대’의 실질적이고 명쾌한 방향과 해법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